



문 4.(배점 2)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1948년 우리 헌법 제정 당시에는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함께 규정되었으며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도 명시되었는데 반해, 1787년 제정 당시의 미국 연방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국교부인의 원칙도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 ②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한다면 국가가 종교를 지원하여 종교를 승인하거나 우대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 헌법 제20조 제2항의 국교금지·정교분리에 위배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제외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③ 종교전파의 자유는 자신의 종교 또는 종교적 확신을 누구에게나 알리고 선전하는 자유를 말하며 포교행위 또는 선교행위가 이에 해당하나, 국민이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이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이 양심의 자유와 별개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종교적 신앙은 윤리적 양심과는 구별되는 내면적 세계의 핵심적 가치이므로 양심의 자유의 침해와는 별도로 종교의 자유의 침해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 ⑤ 사법시험일자가 토요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된 기간으로 지정됨으로써 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이 사법시험에 응시하려면 안식일에 관한 교리를 위반할 수밖에 없게 되어 종교적 행위의 자유가 제한되지만, 이러한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다.

문 5.(배점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 ②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을 스스로 통제하도록 함으로써 타인에게 형성될 정보주체의 사회적 인격상에 대한 결정권을 정보주체에게 유보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바, 지문(指紋)정보는 그러한 결정권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매우 작다.

- ③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달리 공공기관뿐 아니라 법인, 단체, 개인 등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 ④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신청자에게 수급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 및 필요한 급여액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시행규칙은 급여신청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문 6.(배점 2)

권력분립 또는 대의제의 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ㄱ. '국회구성권'이란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의석분포에 국회의원들을 기속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이는 오늘날 이해되고 있는 대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인정될 여지가 없다.
- ㄴ.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권리에 그치고, 개별 유권자 혹은 집단으로서의 국민의 의사를 선출된 국회의원이 그대로 대리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ㄷ. 로크(J. Locke)나 몽테스키외(Montesquieu) 등이 주장한 고전적 권력분립론은 국가권력의 수직적 분립을 중요시 했다면, 현대적 권력분립론은 수평적 권력분립을 강조하고 있다.
- ㄹ.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대법원장을 정치적 사건을 담당하게 될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여시키는 국회의 관련법 제정행위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 ㅁ. 지방공사의 직원은 지방공사의 경영에 있어서 심의·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집행책임은 지는 지위에 있지 않고 경영에 대한 영향력이 임원과는 달리 제한되어 있으므로, 지방공사의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권력분립 내지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 문 23.(배점 3)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ㄱ. “환경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하는바, 환경권은 그 자체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라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판시하고 있다.
- 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볼 때 그 법규범력이 미치는 범위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존’의 보장에 필요한 급부의 요구권으로 한정될 뿐, 그것으로부터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 권리가 직접 도출되어 나오는 것은 아니다.
- ㄷ. 헌법이 제34조에서 여자, 노인·청소년, 신체장애자 등 특정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국가가 특히 이들에 대하여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 ㄹ. 국가는 사회적 기본권에 의하여 제시된 국가의 의무와 과제를 언제나 국가의 현실적인 재정·경제능력의 범위 내에서 다른 국가과제와의 조화와 우선순위결정을 통하여 이행할 수밖에 없다.
- ㅁ.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 보호자의 부담으로부터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이고 의무교육의 비용을 오로지 조세로만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로 정하고 있는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ㅂ.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행정청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이행할 것인가’ 하는 이행의 구체적 방법과 이행시기에 관하여는, 행정청이 다른 여러 과제들과의 우선순위, 재정적 여건 등 다양한 요인들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안으로서, 그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 ① ㄱ(×), ㄴ(○), ㄷ(○), ㄹ(×), ㅁ(×), ㅂ(○)  
 ② ㄱ(○), ㄴ(○), ㄷ(×), ㄹ(○), ㅁ(○), ㅂ(×)  
 ③ ㄱ(×), ㄴ(×), ㄷ(×), ㄹ(○), ㅁ(×), ㅂ(○)  
 ④ ㄱ(×), ㄴ(○), ㄷ(○), ㄹ(×), ㅁ(○), ㅂ(×)  
 ⑤ ㄱ(○), ㄴ(○), ㄷ(○), ㄹ(○), ㅁ(○), ㅂ(○)

## 문 24.(배점 2)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 또는 대리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국회의장의 불법적인 의안처리행위로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이 그의 이름으로 청구한 헌법소원은 적법하다.

- ②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그 학교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 대한 교육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음을 들어 당해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한 헌법소원은 적법하다.
- ③ 내국법인이 의료법인에 기부하는 기부금의 세제 혜택에 있어, 세법이 대학병원 등 특정 의료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일반 의료법인에 대한 그것보다 더 유리하게 규정하여 사실상 기업들이 대학병원 등에 대한 기부를 더 선호하게 되었음을 들어, 일반 의료법인이 당해 세법조항에 대하여 청구한 헌법소원은 적법하다.
- ④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에 의하여 검거된 벌금미납자의 신병에 관한 검사의 업무지휘를 받은 경찰 공무원이, 위 업무지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명령이라고 주장하며 청구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 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격이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때에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그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선임을 거부할 수는 없다.

## 문 25.(배점 2)

위헌성 심사기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 ② 체계정당성 위반 자체가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 위반 내지 입법의 자의금지 위반 등의 위헌성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후일 뿐이므로, 어떤 법률이 위헌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 한다.
- ③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이 예시하는 ‘성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영역이므로, 입법형성권은 축소되고 보다 엄격한 심사적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 ④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자격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설정하는 자격요건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영역에 있으므로, 그 판단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 ⑤ 상업광고 규제에 관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달리 덜 제약적인 수단이 없을 것인지 혹은 입법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인지를 심사하기 보다는, 입법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된다.





문 32.(배점 2)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공직취임권은 국가 등에게 공정한 공직자 선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보다는 그 기본권의 효과가 현실적·구체적이므로,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무담임권을 통해서 기본권 보호를 받는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 ③ 예비후보자 등록 시 일정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는 등 일정한 경우에 기탁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④ 직업공무원의 경우에는 능력에 따라 임용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직업수행 능력과 무관하게 선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의적인 차별이지만, 헌법의 기본원리나 특정조항에 비추어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⑤ 기부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자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까지 포함하면서 기부행위의 제한기간을 폐지하여 상시 제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 33.(배점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소송당사자의 법정 내 녹음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이를 법원조직법 제59조가 정하는 재판장에 대한 녹음신청행위로 보는 경우, 그에 대한 재판장의 녹음불허가는 소송지휘권의 행사가 아니라 사법행정행위(司法行政行爲)로 볼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더라도 재판절차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에 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② 법관의 범죄에 대해 국민의 참여 없이 동료 법관이 재판하도록 하는 것은 법관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고 주장하면서, 형사소송법이 판사의 범죄에 대한 재판에 국민참여를 규정하지 않은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조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부적법하다.
- ③ 헌법재판소는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의 전부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하고 있다.

- ④ 국가기관 내지 행정청은 기본권 주체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질 뿐이고, 당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행정청이 먼저 스스로 당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권력분립원리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행정청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도 같은 법 제72조 제1항의 사전심사 규정이 적용되며, 적법성 심사에는 재판의 전제성 심사도 당연히 포함된다.

문 34.(배점 3)

평등원칙 또는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ㄱ.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요하는 경비를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에 대해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ㄴ. 우체국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 전액에 대하여 무조건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일반 인보험(人保險) 가입자의 채권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 취급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ㄷ. 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한 것은 공무담임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므로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해 심사되어야 하지만,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ㄹ.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만 선거비용의 전액 혹은 반액을 보전해주는 것은, 후보자의 난립을 막고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기준 미만의 후보자는 당선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등에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ㅁ. 음주운전자와 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면서도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방식이므로 형평성에 어긋나 평등권을 침해한다.
- ㅂ.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예비후보자 외에 독자적으로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주체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한 것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유무’라는 기준이 예비후보자의 능력이나 선택과는 무관한 우연적 사정에 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있는 예비후보자와 그렇지 않은 예비후보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달리 취급하는 것이다.

- ① ㄱ, ㅁ
- ② ㄷ, ㄴ
- ③ ㅁ, ㄴ
- ④ ㄷ, ㅁ
- ⑤ ㄴ, ㄷ, ㄴ
- ⑥ ㄷ, ㅁ, ㄴ

문 35.(배점 4)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甲과 乙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단기복무장교로 임용되어 현재 육군 법무관으로 재직 중인 자들이다.

(가) 국방부 장관은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 등에 근거하여 각 군에 ‘외출, 외박 및 휴가로부터 귀영시 일정한 불온도서의 반입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를 하달하였다. 甲은 국방부장관의 위 지시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였고, 위 진정이 기각되자 위 진정기각 결정,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乙은 자신의 딸이 출생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장기복무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부사관, 단기복무 중인 여자군인’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乙과 같은 남성 단기복무장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군인사법 조항으로 인해 그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그 군인사법 조항이 자신의 양육권과 육아휴직 신청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참조>

- 군인사법 제47조의2(복무규율)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불온표현물 소지·전파 등의 금지) 군인은 불온유인물·도서·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복사·소지·운반·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ㄱ.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 결정은 행정처분성이 인정되어서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를 거칠 수 있으므로 위 진정기각 결정에 대한 甲의 심판청구 부분은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
- ㄴ. 군인사법 제47조의2는 기본권의 침해에 관하여 직접 아무런 규율도 하지 않고 군인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군인사법 제47조의2에 관한 甲의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 ㄷ.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甲의 권리를 제한하지만, 이러한 제한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ㄹ. 군인사법 제47조의2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 군인복무규율 조항은 모법상 위임 근거를 상실하여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

- ㄹ. 乙이 주장한 양육권은 공권력으로부터 자녀의 양육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라는 점에서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국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 ㄷ. 乙이 주장한 육아휴직신청권은 양육권의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볼 수 있다.
- ㄴ.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단기복무군인 중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에 규정된 ‘성별’에 의한 차별이지만, 남성 단기복무군인과 달리 장교를 포함한 여성 단기복무군인은 지원에 의하여 직업으로서 군인을 선택한 자들이므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乙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ㄴ, ㄷ, ㄹ
- ④ ㄷ, ㄹ, ㄴ
- ⑤ ㄴ, ㄹ, ㄴ
- ⑥ ㄷ, ㄷ, ㄹ, ㄷ
- ⑦ ㄴ, ㄷ, ㄹ, ㄴ
- ⑧ ㄱ, ㄷ, ㄷ, ㄴ

문 36.(배점 3)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ㄱ.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킥서비스 배달업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사고의 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를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
- ㄴ. 변호사에게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변호사들의 사건수임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어떻게 영업을 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므로 변호사들의 영업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ㄷ.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에 대해서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시장에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ㄹ.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운전전문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운전전문학원이 주체적으로 행해야 하는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 ㄹ.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허가기간을 그 신청일로부터 2개월로 제한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기간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① ㄷ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ㄷ
- ⑤ ㄷ, ㄹ



